

서울시장 재보선 안철수 등판... 민주 경선 '판 키우기' 고심

패배시 대권 행보 빨간불... 야권 연대 흐름 주시

박영선·박주민 출마 고심... 추미애·임종석, 후보군 거론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등판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의 고심이 커지고 있다. 박달민심 등을 고려할 때, 부산시장 보궐선거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인데다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민주당에 절대적 승부처이기 때문이다.

당장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패배할 경우, 민주당 내부의 대선 경선 구도가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 내년 3월 대선 도전에 나서기 위해 대표직을 사퇴할 예정인 이낙연 당 대표도 서울시장 보궐선거

패배가 현실화될 경우,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등 민주당의 차기 대선 구도에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특히, 부산·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이 전패할 경우, 문재인 대통령의 조기 레임덕이 맞물리면서 여권의 국정 장악력이 크게 약화되는 등 차기 정권 재창출 동력 마련이 쉽지 않게 된다.

이를 반영하듯, 민주당은 안 대표의 등판을 '대선 출마를 위한 꼼수' 등으로 평가절하하면서도 물밑

에서는 야권 연대의 흐름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내부에서는 야권의 경우 후보군 채급이 높아지고 단일화 등의 과정에서 흥행 가능성이 한층 커졌는데 여권은 현재의 후보군으로는 미미한 경선을 치르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현재 민주당의 서울시장 후보군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상호·박주민 의원 등 3명 정도다. 우의원은 이미 출마 선언을 했고 박 장관과 박 의원은 박바지 출마 고심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세 사람 모두 경력이 탄탄하고 국민이나 당원들에게 인지도가 있는 인물들이지만 대권에도 도전한 안 대표에 비해서 채급에서 밀리지 않는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야권 연대나

야권 후보단일화가 현실화 될 경우, 민주당의 서울시장 보궐선거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를 반영하듯, 민주당 내외에서는 최근 사퇴 의사를 밝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나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분위기다. 둘 다 대권주자로도 분류되는 인물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하면서 전체적인 판이 흔들리고 있다"며 "우리도 후보의 채급 등을 놓고 논의가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새로운 외부 인사 영입론도 거론되고 있지만 시스템 공전을 강조해 왔던 민주당으로선 현실화 가능성이 크지 않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될

수 있으면 후보군을 최대로 확장하면서 정책 비전 경쟁 등을 통해 흥행바람을 일으켜 나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치권에선 코로나 19 사태가 조기 수습될 경우,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민주당에 유리한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안철수 대표가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했지만 정치적 경쟁력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그를 중심으로 야권 단일 후보를 내기에는 국민의힘 내부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며 "지금 민주당 내에서 거론되는 후보들도 정치적 중립감에서 밀리지 않아 제대로 된 경선을 거친다면 충분히 승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21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이낙연 대표가 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가운데 김태연 원내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변창흠 과거 발언' 인식엔 유감·사퇴는 선긋기

민주당 최고위 회의 "청문회서 해명 가능... 실무 능력 충분"

더불어민주당은 21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정면돌파 의지를 보였다.

박홍배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스크린도어 정비 중 숨진 '구의역 김군'에 대한 변 후보자 발언을 거론하면서 "사회구조적 문제로 인한 중대재해 사망 사건을 개인의 탓으로 인식한 것에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군 동료들과 유가족을 찾아 진심 어린 사과부터 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성민 최고위원은 KBS 라디오에서 "어떠한 해명이라도 무마는 잘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어떤 분들은 국토부 장관으로서 업무 수행 능력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하지만, 공직자로서 인식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다만 야당의 '낙마 공세'엔 정면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후보자 지명철회까지 이어질 사안은 아니라는 것이다. 인사청문회 정국에서 변 후보자를 사수해 내지 못한다면 정국 주도권을 빼앗길 수 있다는 우려도 감지된다.

박성민 최고위원은 "지명 철회 등이 이뤄질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본인이 충분히 소명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박범계 의원도 CBS 라디오에서 "후보자 본인이 사과했다.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 "SH 사장 재직 시 발언이 어떤 맥락에서 나왔는지, 청문회에서 충분히 얘기를 들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그러면서 "후보자가 재개발과 재건축 조건 완화를 전향적으로 얘기했고, 역세권과 다세대·저층 지역을 고밀도로 해서 공공임대주택을 늘리겠다고 했다"면서 "실현이 가능하다면 상당히 좋은 해결방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 핵심 관계자는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자제를 낮추고, 내용을 잘 설명하면서 태도를 겸손하게 가져갈 필요가 있을 것 같다"면서 "현장형 전문가이기 때문에, 실무적인 사안에 들어가면 조리 있는 설명과 돌파가 가능하다"고 했다.

다른 관계자는 "맥락을 잘 살펴보면 크게 문제 될 발언이 아닌데도 보수언론이 왜곡해서 보도하는 부분이 많이 보인다"면서 "변 후보자가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 뛰어난 전문가라는 점을 부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정직 vs 복귀' 윤석열 거취 오늘 결론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이 22일 열린다. 법원이 인용 결정을 내리면 윤 총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경우 심문 당일 결과가 나오는 경우도 있어 이르면 22일 윤 총장의 운명이 결정될 수도 있다.

실제로 올해 보수단체들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집회 금지 집행정지 신청을 맡은 재판부는 심문 직후 저녁 늦게 결정을 내렸다. 이번 사건도 지난날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배제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 대해 일정을 추측하는 시각이 많다.

직무배제 관련 사건의 심문기일이 11월 30일이었고 이튿날인 12월 1일 결과가 나온 점을 고려하면 이번 정직 처분 집행정지 신청은 심문기

일 다음날인 23일께 윤씨가 잡힐 가능성이 크다.

윤 총장이 직무에 복귀할지 여부가 성탄절 직전에 결정될 것으로 보는 이이다. 하지만 직무배제 심문 때는 윤 총장의 검사장계위원회 첫 심의를 하루 앞둔 상황이었다고 달리 이번에는 급박한 사정이 없어 1~2주 뒤 결론을 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이번 사건은 정직 처분 취소를 구하는 본안소송이 정직 기간은 물론 윤 총장 임기인 내년 7월까지도 확정판결이 나기 쉽지 않아, 재판부가 집행정지 재판에서 정계 사유나 절차 등에 대해 심도 있게 심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반면 윤 총장 측의 요청대로 월성 원전 수사 등 주요 사건의 수사지휘나 내년 1월 인사 등을 긴급한 사정으로 고려해 직무배제 심문 때처럼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연합뉴스

與, 소상공인 '손실 보전' 방식 지원 검토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 집행금지·제한에 따른 '손실보전' 방식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원의 목적을 한정하기보다는 현실적 여건을 따져 실질적인 임대료 지원 효과를 내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는 취지다.

21일 당 관계자는 "지원 방안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임대료 지원이 아닌 소상공인 직접 지원으로 가자는 방향"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임대료 명목으로만 지원하는 것은 실제 사용자 등 절차가 복잡해서 행정력도 낭비되고 지원받는 사람들도 힘들다"고 설명했다.

2차 재난지원금 때처럼 매출 등 과거 실적 지표를 기준으로 손실이 큰 이들에게 재난지원금에 포함해서 지급하면 실질적으로는 임대료 지원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한정에 정책위의장은 "결국 정책 지급 방식이 될 수밖에 없는데, 어떤 방식으로 표현할지는 정부가 구체적으로 고민 중"이라며 "이번 주 안에는 정부안이 마련돼야 당정 협의를 통해 1월부터 지

급할 수 있다"고 말했다.

2차 재난지원금 때와 달리 코로나19 확산세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여러 차례 걸쳐 지원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기존 예산에 편성된 목적예비비는 감당하기 어려워 내년 초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불가피하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다만 민주당은 아직은 시기상조라며 추경론엔 선을 그치고 있다. 민주당은 단기적인 임대료 지원과 별개로, 장기적으로 '착한 임대료'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 중이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임대인 개인의 선의에만 의지할 게 아니라 제도적으로 장려하는 방안을 병행해야 효과가 커질 것"이라며 "재난재해 때 임대료 부담을 제도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정책위에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한정에 정책위의장은 "(임대인의) 세액공제 비율을 높이는 등 현 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ESS시공전문기업

태양광발전소 부지·시설 고가매입

당사 및 당사관련사업소에서는
소형(100kW~1,000kW) 중형(1,000kW~3,000kW) 대형(3,000kW이상)의
태양광발전시설을 대량 매입중입니다

● 매매대상 ●

- 개발행위 허가전 발전소
- 개발행위 허가중 발전소
- 현재 공사중인 발전소
- 현재 운영중인 발전소
- 1차 FIT 종료중 발전소
- 곤충사육장 + 태양광
- 버섯재배사 + 태양광

선로 걱정 마시고 전하주세요!

당사에서는 **개발행위**(건축물 위 공작물 축조신고)를 **무료**로 해드립니다. (*건축물 구조진단 비용은 유료)

N·B

환경과에너지종합기술(주)
전기공사업면허 광주 제00988호

상담전화

전국대표 1544-1926
010-7614-1055
010-2845-4754